

기후변화가 가져올 국제통상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

유명희

전 통상교섭본부장

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

I. 배경

▣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통상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

- 미국: 바이든 대통령,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
 - * 타이 USTR(2021): “무역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“
- EU: 2019.12 '유럽 그린딜' 전략을 발표하며, 탄소국경 조정제도 등 무역과 환경 조치 결합한 정책안 잇달아 발표

▣ WTO 등 다자간 논의도 최근 활성화

- WTO: 그간 환경조치가 무역제한적일 경우 견제하던 입장에서 최근 무역과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며 논의 활성화
- OECD, IMF, G7 등 국제기구에서 기후클럽, 탄소가격제 등 대안 논의

II. 주요국의 통상-환경 연계 조치

1.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(21.7, 집행위안)

- 목적: 탄소누출 위험 방지 및 EU 역내외 기업간 동일한 경쟁조건 조성
- 대상: 철강, 알루미늄, 비료, 시멘트, 전력 (5개 부문 우선 적용)
- 방식: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
- 발효: 3년(23~25년) 과도기 이후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
- 일정: 유럽의회안(22.6, 기존 5개 품목 + 플라스틱, 유기화학품 등),
이사회안(22.6) → 금년 하반기 3개 기관 협의, 합의안 도출후 **23년 발효**

※ EU의 기업 공급망 실사법안(22.2): 대상 기업에 대해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, 노동 등에 대한 실사 및 대응 공개 의무 부과

II. 주요국의 통상-환경 연계 조치

2. 미국: 기후변화 대응 + 산업정책 + 대중국 공급망 재편

□ 미-EU간 지속가능한 철강·알루미늄 생산 글로벌협정 추진 합의(21.10)

- 그간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하던 관세 분쟁을 타결하며 ‘지속가능 철강·알루미늄 글로벌 협정’을 2년내 체결하기 합의
 - * 이를 통해 탈탄소화 촉진 및 과잉공급 문제 해결 (최초의 탄소기반 분야별 협정(carbon-based sectoral agreement))
- 철강·알루미늄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반 설치
- 추후 유사입장국도 참가, 탄소 과다배출 철강에 대해 수입규제 가능성 시사
 - * Joseph Stiglitz: 글로벌협정으로 발전시켜 시멘트, 화학제품 등 확대 제안

II. 주요국의 통상-환경 연계 조치

□ 미 IRA(인플레이션 감축법)의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(22.08)

- **의의:** ①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대응 투자 법안으로 에너지 안보·기후 변화 대응에 **3,690억불** 투자, ② 미국내 투자 확대,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 지원, ③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
- **주요 내용**
 - EV 세액공제(\$7,500): ① 북미에서 최종 조립, ② 배터리 광물 조건 충족시 \$3,750 (미국·FTA 체결국에서 추출·처리 비율 40%~80%), ③ 배터리 제조 조건 만족시 (미국내 제조 비율 50~100%) \$3,750
 - 재생자원 활용한 전력생산 세액공제 연장, 원자력 발전 세액공제 신설, 바이오디젤 등 대체연료 세액공제 연장, 청정수소 세액공제 신설, 미국내 첨단 제조(태양광 모듈·웨이퍼 등) 세액공제 신설, 청정에너지기술 융자 등

III. 다자 차원의 통상-환경 연계 논의

1. WTO내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 출범 (2020.11)

- 그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개도국 입장: 녹색 보호주의
- 최근 통상과 환경 연계의 본격 논의·진전을 희망하는 회원국간 ‘**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**’ 출범(한국을 비롯, 미, 중, EU 등 **71개국** 참여)
- **2021.12월 71개국간 각료선언문 채택**
 - 무역 관련 환경 조치와 정책이 WTO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 논의키로 합의
 -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촉진 및 원활화 방안 모색 등

III. 다자 차원의 통상-환경 연계 논의

2. IMF: 국제 탄소가격 하한제 도입 제안(21년)

- 목적: 현재의 국가 감축목표(NDCs)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완 필요
- 대상: **G20회원국**(전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**85%** 비중 차지)
- 장점: 160여개국에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파리협정에 비해 협상 수월, NDCs와 달리 국가간 감축 노력을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3. OECD: 포괄적 탄소 저감 접근 포럼 출범(IFCMA, 22.6)

- 국가별로 상이한 기후변화 정책(탄소가격, 기술지원 등)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, 이에 상응하는 탄소가격 통계 구축 및 정책결정 위한 정보 제공
-

III. 다자 차원의 통상-환경 연계 논의

3. 기후클럽 (Climate Club)

□ Nordhaus의 기후 클럽 제안(2015 및 2020): 국제 다자 환경 협력에서 무임승차(free-rider)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후클럽 개념화

- 클럽 멤버간 배출감축 목표에 합의하고 불이행시 페널티 부과, 협정을 통해 국제탄소가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
- 비참여국에 대해 페널티 부과(전 품목에 대한 일률적 탄소관세 부과)

□ 2022 G7 의장국 독일의 기후클럽 제안(2022): G7와의 파트너십을 G20로 확대하여, 모든 국가에 개방되고 협력적인 글로벌 기후클럽 논의 추진

- 탄소누출 방지 조정을 위한 공동의 조치 및 탄소가격제, 공동의 정책 및 기준을 통한 산업의 그린 전환 지원 등 추진

IV. 우리의 대응

1. 규제보다는 **新산업·기술혁신** 유도의 기후변화 대응정책

- 기후변화는 **세계적 대세**로 국내 산업계도 생산방식과 사업모델 전환을 통해 **새로운 산업 성장과 친환경 기술혁신 기회로 활용 필요**
 - **민관간 긴밀한 소통**을 통해 산업별 기술확산 등 **지원·유도**해 나갈 필요
- 주요국의 환경·통상 연계 정책은 **환경정책이자 산업정책적 성격**
 - **미-EU 철강 deal**: 환경정책(탄소과다 배출 수입철강 제재) + 중국 **over capacity** 대응 + 미 철강산업 부흥
 - * 철강산업 탄소집약도: **미(0.84), 유럽(1.0), 한국(1.3), 중국(2.15)**
 - 미국·EU 등의 기후클럽 논의 배경에는 자국의 **탄소우위(carbon advantage)**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 의도
 - * 경제 전반의 탄소집약도: **미(1.0), 유럽(0.9), 중국(3.2), 세계평균(1.8)**

IV. 우리의 대응

2. 환경 관련 일방적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

-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한 **일방적, 국제규범 위배 소지 조치 증가** 예상
 - * Paul Krugman(22.9): “IRA법이 비록 무역협정을 위반하더라도 **지구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**” (“탄소배출 대응에 필요하다면 무역협정 위반도 좋다”)
- 각국의 환경관련 무역조치가 **일방적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**

3. 기후-통상-산업·에너지를 아우르는 국제경제질서 전략 마련

- 각국의 일방적 조치 도입에서 나아가 유사입장 국가끼리 연계하는 기후클럽식의 탄소기반 통상협정 체결 흐름에 미리 대비 필요
 - IPEF의 무역 및 청정경제 의제(pillar), OECD 관련 포럼 등 적극 참가